]

Vol. 42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2020. 10. 26.

▮ 정책동향

-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주요 결과
- 지역뉴딜을 선도하는 12개 우수 지역특구 선정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 한-유럽연합, 국제사회 그린뉴딜 공조 강화
- 정세균 국무총리,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목요대화 개최
- 태풍 피해 벼 수매 2020년 10월 21일부터 시행
- 베트남 수출용 온실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조성 추진
-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농장 힐링·체험프로그램 제공
- 제1회 농산물 수급 예측모형 경진대회 개최
- 제6회 농산물우수관리(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 각 시도별 주요 정책 동향

▮ 아젠다발굴

- **이슈 브리프** ❙ 세계 도시의 현재와 미래 전망
-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인식 제고
-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식품영양라벨링 정책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일본 농촌 현황(인구감소, 귀농귀촌, 코로나19 영향)
- **언론 동향** ❙ 농산촌 태양광시설 주요 동향

▮ 통계·조사

- 한우농가 영농 승계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

정책동향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주요 결과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0.10.21.)

❑ 개요

○ [정부,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주요 결과, 2020.10.21.] 국무조정실은 2020년 9월 3일 차관회의부터 총 7차에 걸쳐 29개 기관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시행했으며, 2020년 10월 21일 일정을 마무리

일자	발표 부처
(1차) 2020.09.03.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혁신처
(2차) 2020.09.10.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3차) 2020.09.17.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통일부, 관세청
(4차) 2020.09.24.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해양경찰청
(5차) 2020.10.08.	환경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6차) 2020.10.15.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7차) 2020.10.21.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서울시

- (추진 목적) 기관별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중점추진과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국민불편·기업지원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차관들이 직접 설명함으로써 기관장 독려를 통해 우수한 시책과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유도

❑ 주요 내용

1. 각 기관 선정·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 적극적 법령해석 및 개정을 통해 현장과 규정의 괴리 극복

◈ (보건복지부)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상황에 신속한 방역대응체계 마련(생활치료센터, 검사체계, 방역물품 공급, 특별입국절차 운영 등), 치료제·백신개발 시급 → *맞춤형 적극행정(적극행정위원회 54회, 사전컨설팅 13건 등)으로 위기 상황에 효과적 대응, 공직사회 변화 선도*

◈ (중소벤처기업부) 2020.8월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무등록 소상공인(139개 업체) 정부 지원 곤란 →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수해 무등록 소상공인 특례지원 결정 → 사후 107개 점포 사업자등록 유도 및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운용기준 개정

◈ (기획재정부) 융복합·비대면 등 혁신적 환전·송금서비스 시도에 제도적 지원 미흡 → 환전·송금 전면허용 및 신사업규제 신속 확인·면제제도 도입(2020.10., 규정 개정) → 소비자 편의 제고, 신시장 창출을 통한 혁신사업자·소상공인 수익증대 기대

정책동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전무, 단시일 내 개발도 어려운 상황 → 민·관 협업으로 '약물 재창출 협의체' 구성(2020.2.), 조기에 후보물질 도출 및 전임상 시험 지원 → 신속한 임상 착수 및 이르면 2020년 말 의료현장 적용 기대

◈ (국민권익위원회) 양구 정책이주민 경작 무주지 소유권 문제 발생 → 9개 기관 T/F팀 구성, 법 개정 등 적극 행정 → 무주지 22,968필지(접경지 19,539 + 양구 3,429) 국유화 및 보상·매각

◈ (국토교통부) 불친절, 승차 거부 등 기존 택시 서비스 불만 누적 및 O2O기술 활용 플랫폼 업체 속속 등장 → 업계 간 갈등 해소, 규제특례제도 등 적극행정을 통한 서비스 조기 출시 지원 →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으로 운송업계 활성화

◈ (산업통상자원부) '건물용 소(小)수력 발전'은 신기술로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규정 미비 →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건물용 소수력 발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 →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유통의 도매시장 의존도가 높아 유통비용 과다, 신선도 저하 등 문제 다수 발생 → 선제적 규제개선(2020.5.)으로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개설 → 수도권·도매시장 농산물 유통 집중 현상 및 가격 등락 폭 완화에 기여

◈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격 상실 시 생활조정 수당도 '즉시' 중지되어 생계 곤란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로 지급 중지 유예(3개월) 조치 → 이후 불합리한 규정 개선(2020.7.), '즉시' 중지 → '소득조사 후' 중지를 통해 단절 없는 생계지원

❍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 생활안정·편익증진에 기여

◈ (교육부) 개학연기 및 원격수업으로 학교급식 중단, 생산농가 어려움 및 학부모 식비부담 증가 → 잔여 급식비로 '농산물 꾸러미' 지원(적극행정위원회 상정·의결) → 14개 시도, 1개 군에서 499만 명(약 3,684억 원)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국민 불안 고조 → 마스크 관련 적극행정위원회 안건(55건) 신속 처리,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허가면제) →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 및 국내 진단시약 우수성 입증(세계 150여 개국 2억 명분 수출)

◈ (환경부) 영세업체 어린이용품 수입·제작·판매 증가로 아동 피해 우려 → 부처협업으로 5,000개 이상 용품 위해성 평가(환경기준+특별관리기준) 후 위반업체(3사) 고발, 위반용품(26개) 리콜 시행 → 어린이용품 관리 강화 협업 제도화(2020.12.) 추진

◈ (인사혁신처) 코로나19 상황에 공공·민간기관 채용시험 운영 어려움 호소 → 공공부문 공채시험의 방역 성공 사례를 워크숍·국제회의 등을 통해 국내외에 전파 → 대규모 시험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예방 지원

◈ (여성가족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역량강화사업 중단', 가족경제 위기 직면 → 적극행정위원회 법령해석으로 사례관리 지원에서 생필품 등 맞춤형 긴급지원으로 '사업변경' → 취약계층 생필품 3,200여 건, 학습지원 7,500여 건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제 5,680개교 중 327개교는 학생 수가 적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교복업체가 교복 공급 거절, 학생 불편 초래 →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부 및 한복 업계와 협업으로 한복 교복 보급 추진, 16개교 2,300여 명에 보급

◈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방송 제한적 실시로 코로나19 등 정보 불평등 심화 → 관계기관 지속 협의·논의로 뉴스 하단 한국수어 제공 등 청각장애인 방송접근권 강화

◈ (서울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돌봄 공백 발생 → '돌봄 SOS센터', 'IOT비대면 돌봄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실시간 복지서비스 제공

정책동향

◈ (국방부) 혹한기 훈련 시 해치를 열고 장갑 없이 운전하는 전차조종수 상시 추위 노출 → 바이크용 발열 필름(금액 저렴, 시중구매)을 핸들에 부착, 전투력 향상

◈ (통일부) 신청기준 제한, 절차 복잡성으로 일반 국민 판문점 견학기회 제약 → 유엔사 비롯 관계기관 협의, 견학창구 통일부로 일원화, 신청 기간 단축(60일 → 14일)

❍ 기업불편 해소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 (행정안전부) 코로나19로 경제 전반 어려움,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기존 금융 인프라, 주민센터, 정부 데이터 등 가용자원 최대한 활용 적극 대응 → 국회 예산 통과일(2020.4.30.)로부터 한 달 만에 전 국민 가구 98.2% 지급 완료

◈ (외교부) 방역을 이유로 한 각국의 외국인 입국 제한으로 우리 기업인 해외비즈니스에 애로 발생 →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화 추진 → 2020.9.10일 기준 기업인 예외적 입국 20개국 19,733명 성과 달성

◈ (공정거래위원회)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로 25만여 가맹점 매출에 타격 → 가맹점주 부담을 완화해 준 '착한프랜차이즈' 가맹본부(232개)에 정책자금 지원 → 소속 가맹점(35,130개, 전체 13.9%)에는 약 236억 원의 경제적 지원으로 돌아감.

◈ (해양수산부) 국내기업 수출입 물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해운산업 시장경쟁력 회복 시급 → 국적선사에 파격적 금융지원으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12척 유럽항로 투입 → 21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1,387억 원), 해운재건 가시화

◈ (고용노동부) 경영악화로 폐업 통보한 A사, 노조는 고용안정 요구하며 첨예한 대립 → 적극적인 행정지도(양측 설득 및 노사정 회의 등)로 폐업철회(2020.6.), 노사상생 끌어냄.

◈ (금융위원회) 코로나19 피해기업 자금공급을 위해 건전성·유동성 규제 완화 필요 → 전 금융권 유연화방안 추진(2020.4월, 8월), '선제적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최초 발급 → 실물경제 지원역량 강화, 기업 자금공급 확대에 기여 (※ 국민추천사례)

◈ (관세청) 해외여행객 급감으로 면세업계 존폐위기 → 면세점 재고물품 유보된 세금 납부 시 예외 '국내유통' 허가(적극행정위원회 의결) → 2020.8월 기준, 총 1,600건 수입통관, 620억 원 유동성 지원 및 122억 원 국가재정에 기여

2. 각 기관 기획·시행 중인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 기관장·부서장이 앞장

◈ (전 부처 공통) 기관장 대내외 회의 및 현장에서 적극행정 수시 강조

◈ (법제처) 법제처장이 사내방송 일일 DJ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및 음악 선물

◈ (여성가족부) 기관장+우수공무원 '적극행정 Talk 영상' 제작 및 내부직원 공유 붐업

◈ (중소벤처기업부) 실국장이 강사가 되어 적극행정 노하우 공유하는 'MSS아카데미' 운영

◈ (해양수산부) 장관 직속 '바다드림팀' 운영, 주요 적극행정 사항 매월 장관 보고

◈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소속 지방관서 등 현장 소통을(고용노동부 26회, 국가보훈처 27회) 진행하여 기관별 적극행정 애로 해소

◈ (국토교통부) 장관주재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적극행정을 중점과제로 관리

정책동향

❍ 파격적인 적극행정 인센티브 부여

◈ **(전 부처 공통)** 우수공무원 선발규모 확대 및 성과급 등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실패사례**를 **'올해의 도전왕'**으로 **선정, 격려**

◈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경진대회 개최**로 상위 입상자 **특별승진**, **국외훈련 선발 가점** 등 파격적인 **보상**

◈ **(관세청) '이달의 관세인'** 적극행정 분야 **신설**(상반기 5명 선발) 등 **적극행정 포상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별 포인트제도' 시행**, 전 직원이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유도

❍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정비 등

◈ **(전 부처 공통)**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를 통해 **실무자 부담완화** 및 **지원 강화**

◈ **(해양경찰청)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통해 행정업무가 아닌 **예방 순찰** 등에 역량 집중

◈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정책자문 분과위원회' 설치**(2020.6.) 및 운영(3회)

◈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감소통관' 운영**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조직 구성원 신뢰 구축**

◈ **(서울시)** 내부 **소극행정예방시스템 운영**으로 **실무자 부담완화, 제도 안정화**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기관·부서 평가 항목**에 **'적극행정 이행 노력도' 반영**, 조직 내부 적극행정 분위기 마련

❍ 적극행정 주체인 직원참여소통 활성화 등

◈ **(행정안전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조직·부서 단위 **'우수부서 칭찬 챌린지'**(행정안전부), **'1부서 1혁신 캠페인'**(교육부) 실시, **'적극행정 협업부서'** 선정(방송통신위원회), 우수사례 확산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서비스 평가** 및 **반부패 관련 평가**에 **적극행정 요소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일부)** 적극행정 **아이디어 창출**, 사명감 제고를 위한 **어벤저스·통통청년단**(20~30대, 10년 차 미만) 운영 **수평적 소통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우수직원 **'재추천·패자부활전' 운영**으로 선발기회 확대, 상시 관심 유도

◈ **(국가보훈처)** 매주 보고형 회의를 개선 → **'화요토론회의' 운영**으로 소통 활성화

◈ **(여성가족부)** 문서 작성 최소화를 위한 **'회의자료 공유방' 개설·운영**(2020.8.~)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공유 한마당**(2020.9.), **농식품 정책 콘서트**(2020.10.)로 **우수사례 공유***

❍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적극행정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체 및 사업자단체 **'소통창구' 운영**(반기 1회, 전담직원 지정)

◈ **(해양경찰청) '적극성'**을 **10대 필수가치**로 선정, **해양경찰헌장 리뉴얼**로 공직가치 내재화

◈ **(법무부) 정부법무공단 지원 범위**를 현 민사책임소송에서 고소·고발 형사사건의 경우까지 **확대**(2020.10., 법 개정) 적극행정 직원에 대한 보호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사례 홍보영상** 등 제작, 박물관 등 **소속기관 대형 전광판**을 통해 **홍보**

◈ 총괄정책 동향

지역뉴딜을 선도하는 12개 우수 지역특구 선정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20.10.21.)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뉴딜을 선도하는 12개 우수 지역특구 선정, 2020.10.21.] 전국 190개 특구의 2019년 실적을 토대로 2020년 운영성과를 평가해 **최우수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와 **우수**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 **'고흥 유자·석류 특구'** 등 12개 우수특구를 선정

※ '충남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연구-가공-유통시설 및 체험단지 조성으로 고용(49명↑) 및 수출(중국 등 60억 원) 창출

- **(주요 내용)** 이번에 **선정**한 **우수특구**는 **지역특화자원**의 **세계화**로 **고용, 수출** 등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으며, 이번 우수특구에 대통령상 등 포상과 **총 9억 5,000만 원 포상금**으로 **지역특화발전 가속화**를 **지원**할 계획

▌2020년 우수 지역특구▐

최우수	충남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대통령상, 2억 원
우수	서울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 전남 고흥 웰빙유자석류 특구	총리상, 각 1억 5,000만 원
장려 (9개)	경기 이천 도자 특구, 전북 임실 치즈 특구, 강원 홍천 귀농·귀촌 특구, 전남 담양 인문학교육 특구, 전남 해남 고구마 특구, 부산 동래 문화교육 특구, 전북 고창 복분자 특구,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대전 근대문화 예술 특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각 5,000만 원

〈지역특화발전특구 개요〉

◈ **(배경)**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특구법, 2004~)

※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세제 지원은 없음.

◈ **(절차)**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면, 부처협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 효과)**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58개 개별법에서 정한 128개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 내 적용 가능

◈ **(운영현황)** 2004년 제도도입 이후, 214개 특구가 신규지정 되었고 19개 특구가 해제·통합되어, 현재 195개 특구가 지정·운영※, 150개 기초지자체(전체 229개 중 65.5%)가 지역특구를 운용 중이며, 128개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총 1,012건 활용 중(특구 당 평균 5.2건)

※ 제4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결과 고시(2020.10.21.) 기준

◈ **(운영성과)** 민간 9천억 원을 포함한 연 2조 원 규모 신규 투자를 기반으로 약 7천 개 기업이 9만 명을 고용하고 18조 원 매출을 유발(2019년 기준)

제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탄생

자료 : 기획재정부(2020.10.16.)

○ [기획재정부, 제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탄생, 2020.10.16.] 기획재정부는 2020년 10월 16일 '대구경북로컬푸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제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인가하고, 회원인 농부장터 로컬푸드 매장을 방문하여 설립인가증을 수여

※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개별법 협동조합(신협·생협)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연합회(협동조합기본법 개정, 2020.3월 공포, 2020.10.1. 시행)

※※ '대구경북로컬푸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대구경북 로컬푸드 관련 협동조합(협동조합 6개, 사회적협동조합 2개, 생협 2개로 구성)들이 지역 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설립

- (주요 내용) △연합회 설립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생산자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규모 로컬푸드 직매장의 농산물을 다양하게 확보, △향후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기획생산 및 지역 농가공 상품을 확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동 운송물류 차량, 저장창고 등 유통시스템도 구축할 예정

▌기존 연합회와 비교▐

구분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선택 가능
설립	기획재정부장관에 설립신고	기획재정부장관 인가	기획재정부장관 인가
발기인	3개 이상의 협동조합	3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	5개 이상의 협동조합 · 사협, 생협 또는 신협
1개 회원 조합의 출자한도	총 출자좌수의 40% 이내		
의결권 · 선거권	차등 부여 가능, 대리인 행사 불가능		
임원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 1명 이상의 감사		
공제사업	가능		
경영공시	요건에 해당될 시 경영공시 대상	모든 연합회 경영공시 대상	모든 연합회 경영공시 대상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 이상	잉여금의 30% 이상	영리: 잉여금의 10% 이상 비영리: 잉여금의 30% 이상
배당 및 잔여재산 임의처분	배당 가능	배당 불가능	영리: 배당 가능 비영리: 배당 불가능
잔여재산	정관에 따라 처분	유사 사협연합회 · 비영리법인 · 국고 등 귀속	영리: 정관에 따라 처분 비영리: 유사 이종연합회 · 비영리법인 · 국고 등 귀속

상생과 협력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본격화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10.21.)

○ [산업통상자원부,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본격화, 2020.10.21.]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10월 20일 제2차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원 횡성형 일자리** 및 **경남 밀양형 일자리**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

- **(주요 내용) 중소기업 중심**(조합결성, 공동사업 추진 등)의 새로운 **상생형일자리 모델 제시**, △**횡성형**…**국산 전기화물차 완성차·부품기업 간 투자이익 공유**를 통한 기업 간 상생, △**밀양형**‥**뿌리기업**의 **친환경·지능화 전환**을 통한 기업-주민 간 상생, △**지원내용**…각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기업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근로·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 문화센터, 직장 어린이집, 일터혁신 컨설팅** 등 **고용·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

- **(향후 계획)** 정부는 선정된 지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함께 **신규 상생 모델 발굴**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

◈ **(강원 횡성형 일자리)** 전기차 관련 중소기업들이 모여 이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협동조합(디피코 등 7개 기업)을 결성하고, 총 742억 원 투자(평가기간 3년 내 590억 투자) 및 503명을 고용하여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생산할 계획

– 특히, 협동조합 내 완성차 업체와 협력업체가 초과 이익을 공유※하고, 물류, 판매망 등을 공동 활용하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함.

※ 협력업체의 영업이익 5% 이상 보장 및 디피코사의 5% 초과 이익 재분배 등

–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적정임금 보장과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에 합의하고, 강원도는 정주 여건 개선, 사업 환경 기반 조성 등의 지원을 통해 근로자와 업체에 특전을 제공할 계획

◈ **(경남 밀양 일자리)** 친환경·지능형 뿌리산단(하남산단)을 조성하여 총 1,594억 원을 투자(평가기간 3년 내 1,281억 투자)하고 245명을 신규고용할 계획

– 지금까지 입주 기업은 주민상생기금 조성, 환경설비 의무화 등을 통해 인근 지역 주민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 원·하청 기업 간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준수, 납품 물량 보증 및 확대 등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납품단가를 인상

– 앞으로 최신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여 근로자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절감※하여 시장경쟁력을 높일 계획

※ 연간 생산능력: (기존) 19만 600톤 → (계획) 32만 4,800톤, 70%↑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10.21.)

○ [산업통상자원부·산림청,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2020.10.21.]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20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 유출(3.6ha) 피해가 발생(산지태양광 피해는 2020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旣설치 설비, 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

- (주요 내용) △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설비 안전 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旣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신규 진입 설비…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미비점 고려한 제도 개선〉

◈ (旣설치 설비) ❶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❷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❸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❹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 (未복구준공 설비) ❶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❷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❸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 (신규 진입 설비) ❶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前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❷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現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1.上), ❸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 전 이행 의무화, ❹ 설계·시공·관리 등 전(全) 주기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한-유럽연합, 국제사회 그린뉴딜 공조 강화

자료 : 환경부(2020.10.20.)

○ [한-유럽연합, 국제사회 그린뉴딜 공조 강화, 2020.10.20.] 환경부는 2020년 10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제2차 한-유럽연합(EU) 그린딜 정책협의회※를 열고, 그린뉴딜 협력과 국제무대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

※ (한국 측)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유럽연합 측) 아스트리드 슈마커(Astrid Schomaker)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환경총국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

- (주요 내용) 최근 그린뉴딜 정책의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생태복원, 순환경제, 녹색금융 및 그린뉴딜 국제협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제2차 한-유럽연합(EU) 그린딜 정책협의회 주요 논의 내용〉

◈ (한국) 그린뉴딜을 ① 재정투입, ② 민간투자(펀드·금융), ③ 법·제도 개선, ④ 지역 확산의 4개 축으로 추진 중인 현황을 소개하고, (유럽연합)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및 2050년 탄소중립 등 유럽기후법 제정안 논의와 관련된 최근 동향을 공유

◈ (생태복원) (한국) 그린뉴딜에 포함된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 방안※을 설명하고, (유럽연합) 2020년 5월에 발표한 '2030 생물다양성 전략' 중 특히 보호지역, 생물이동통로, 도시 생태복원 관련 정책을 소개

※ 훼손실태 진단, 복원목표 설정, 복원 기본방침 제시, 복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등

◈ (순환경제) (한국)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2020.9.23.)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유럽연합) 2020년 3월 발표한 '순환경제 행동전략'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제안

※ (발생) 폐기물 원천 저감형 설계·생산, 유통 포장재 관리 강화
(수거)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공공 책임수거로 전환
(재활용) 선별품 품질 개선 및 재생원료 사용 인센티브 도입
(처리)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강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 (녹색금융) (한국)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 녹색채권 안내서 마련 등 녹색산업 성장기반 구축 방안을 소개하고, (유럽연합) '지속가능한 금융전략' 및 지속가능한 금융 국제 플랫폼 구축방안 등 추진 중인 전략을 소개

◈ 아울러, 2021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제2차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 중인 '글로벌 그린뉴딜 연대' ※※ 선언 등 국제무대에서 그린뉴딜의 확산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

※ 피포지(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UN) 총회 제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 연설(2020.9.21.)에서 제안

◈ 농업 · 농촌 동향

정세균 국무총리,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목요대화 개최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0.10.22.)

❑ 개요

○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22차 목요대화 개최, 2020.10.22.]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0년 10월 22일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함께 제22차 목요대화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장기화, 집중호우, 태풍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필요사항을 논의

※ 임영호(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정한길(농민의길 상임대표), 고문삼(한국농업인단체연합 상임대표), 하태식(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김제열(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인련(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 김옥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 주요 내용

○ [농업인단체]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한편, 풍수해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국민 먹거리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등을 요청 ➡ [정부] 재해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2020년 11월부터 벼·밭작물에 대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영농재개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혀

※ △(영농재개) 살충제·영양제 등 할인 공급, 농기계 수리지원, 복구지원 일손돕기 등
△(금융지원)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감면·상환연기, 신규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재해보험금) 과수, 원예시설 보험금 旣지급(9.28), 벼·밭작물 보험금 지급(11월)
△(피해벼 수매) 흑백수, 수발아 등 피해벼에 대해 매입 추진

○ [농업인단체] 코로나19의 장기화,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대책이 필요 건의 ➡ [정부]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는 한편, "제2차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021~2030)"을 2020년 내 마련하여 추진

○ [농업인단체] 지역별 위험 수준에 맞는 적정보험료 부과 필요 등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요구 ➡ [정부] 보험요율 및 보장수준의 적정화로 보험제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등 2020년 연말까지 '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

정책동향

○ [정세균 국무총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농업인의 권익을 향상”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정부의 존재 이유’ “라고 강조

- 이번 수해 피해 농업인들이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지원 및 농가 피해 복구, 조속한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한시적으로 상향한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상한(10만 원 → 20만 원) 연장요구에 대해서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 아울러, 건강한 국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취약계층이 끼니 걱정을 하지 않도록 농식품바우처를 중심으로 도농이 상생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태풍 피해 벼 수매 2020년 10월 21일부터 시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10.21.)

○ [농식품부, 태풍 피해 벼 수매 시행, 2020.10.21.] 태풍 피해 농가의 손실 최소화하고 낮은 품질의 저가 미가 시중에 유통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등외규격을 신설하여 2020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태풍 피해※ 벼※※ 매입 추진

※ 태풍 도복 피해면적(ha): 20,895(전북 8,419, 충남 4,261, 전남 3,407, 경기 1,348 등)

※ 흑·백수 피해면적(ha): 24,975(전남 20,467, 전북 3,218, 인천 698, 경북 583 등)

※※ 피해 벼는 포대벼(30kg, 600kg) 단위로 매입하며, 품종과 관계없이 매입하나 유색 벼 및 가공용 벼는 참여 제한

- (주요 내용) △매입시기…2020.10.21.~11.30., △매입물량…태풍 피해 농가의 수매 희망 물량, △매입가격…공공비축 미곡 1등급 기준가격으로 잠정 등외 A는 71.8%, B는 64.1%, C는 51.3% 수준, 중간정산금(2만 원/30kg)은 수매 직후 지급하고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정산

▌피해 벼 품위 검사기준 및 가격수준▐

구 분	수분(%)	최저한도(%)	최고한도(%)				가격수준 (공공비축 1등기준, %)
		제현율	피해립·착색립		이종 곡립	이물	
			계	착색립			
잠정 등외A	13.0~15.0	56.0 이상	20.0 이하	–	2.0	2.0	71.8
잠정 등외B	13.0~15.0	50.0 이상	30.0 이하	–	2.0	2.0	64.1
잠정 등외C	13.0~15.0	40.0 이상	40.0 이하	–	2.0	2.0	51.3

베트남 수출용 온실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조성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10.19.)

○ [농식품부, 2020년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 대상 컨소시엄 모집, 2020.10.19.] 농식품부는 메콩 유역의 신남방 국가인 베트남에 진출할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신남방 지역까지 스마트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 대상자(베트남)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

※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스마트팜 수출 유망국가(2개국)에 수출 거점 조성을 위해 스마트팜 컨소시엄이 시범(데모)온실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으로, 2020.4월에 스마트팜 수출 유망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사업을 주관할 컨소시엄('K2 Agro Farm')을 선정한 바 있음.

- (주요 내용) △일정…사업공모(2020.10.19.~11.13.) → 평가(11.10.~11.19.) → 사업자 선정(11.20.), △참여대상…스마트팜 관련 기업, 농업법인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자격…재무건전성, 기술력 등에 문제가 없는 컨소시엄, △지원내용…선정된 1개 컨소시엄에는 시범(데모)온실 조성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인력·현지 교육·시연회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

※ 온실 시공·설계, 기자재, 운영 등 각 분야의 전문 업체로 구성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농장 힐링·체험프로그램 제공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10.22.)

○ [농식품부, 사회적 농장 힐링·체험 프로그램 제공, 2020.10.22.]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 코로나19 대응 인력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장의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사회적 농장〉

- (정의)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전국 13개 시·도, 총 30개소)
  -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과 함께 농산물 생산·유통, 직업훈련, 원예치료, 공동체 활동 등을 실시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있음.
  - 현재 17개의 사회적 농장이 발달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코로나 우울(블루) 극복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반려식물 제공에는 15개소가 참여하고 있음.

정책동향

- (주요 내용) △코로나19로 돌봄시설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개방된 **농장 환경 및 신체 활동 프로그램** 등 **제공**(연중), △심신이 지친 **코로나19 대응 인력**(의료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체험 프로그램** 및 **반려식물 제공**(2020.9~11월), △한편,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 확진자** 및 **격리자**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사업**※도 **추진 중**(최대 14일)

  ※ (지원내용) 국고에서 70% 지원(최대 49,000원), 본인 부담 30%

사회적경제기업 산림서비스 분야 비대면 기획전 진행

자료 : 산림청(2020.10.23.)

○ [산림청, 사회적경제기업 산림서비스 분야 비대면(온라인) 기획전 진행, 2020.10.23.]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코로나 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숲과 함께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갖게 하고,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산림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새로운 판로 확대 기회**를 찾기 위한 **비대면(온라인) 기획전 '자연으로 집콕 탈출'**을 **진행**

- (주요 내용) △**기간**…2020년 10월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4주간), △**참여 기업**… 10개의 기업, △**프로그램**…목공반, 임산물요리체험, 숲생태탐험(에코티어링※), 숲길걷기(트레킹) 등 20개의 프로그램, △기획전 동안 선착순 200명에게 최대 10,000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별도로 참여후기 홍보 행사도 진행할 계획

  ※ 에코티어링: 생태(ecology) + 오리엔티어링(orienteering) = 지도와 나침반을 이용하여 목적지를 찾으면서 생태 문답을 풀어보는 프로그램

- (기대 효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에게는 **매출**에 **보탬**이 되고, **국민**에게는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것으로 기대

제1회 농산물 수급 예측모형 경진대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10.21.)

○ [농식품부, 제1회 농산물 수급 예측모형 경진대회 개최, 2020.10.21.]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과 한국농업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회 농산물 수급(생산량) 예측모형 경진대회"를 개최

- (개최 목적)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수급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관측 시스템 구축

- (주요 내용) △대상※…개인 또는 단체 등 참가 제한 무(無), △공모 분야…지정과제 1, 자유과제 1, △시상※※…분야별 8점※※※: 최우수 1, 우수 2, 장려 5

※ 대학생, 교수, 민간 프로그래머 등 농업분야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산물 수급 관리 모형 설계가 가능한 누구나

※※ 수상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력 채용 시 가점 부여

※※※ 부문별 각 8명: 최우수 1천만 원, 우수(2명) 5백만 원, 장려(5명) 2백만 원

▌제1회 농산물 수급 예측모형 경진대회 분야▐

분야		제공 자료(참가자 자체 보유 data 등 활용 가능)
지정과제	• 생산량 예측모형 ※ 마늘 · 양파	• 농업관측본부 실측조사 데이터(2020.7.16.~ KREI 홈페이지 공개) • 이미지 자료(항공 촬영, CCTV 촬영 등 관련 자료) ※ 제공 데이터 외 자체 보유 데이터 등 추가 활용 가능 • 참가자 자체 보유 데이터, 농업분야 각종 데이터
자유과제	• 생산량 예측모형 ※ 배추, 무, 건고추 • 기타 농업관측 관련 수급 모형	

- (향후 계획) 경진대회 사전설명회(2020.11.17.~18.)를 시작으로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KREI 홈페이지(http://www.krei.re.kr)를 통해 참가 접수가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접수 후 모형 개발 기간(~2021.5월 말)을 거쳐 평가·심사 후 2021년 6월에 발표될 예정

- (기대 효과) 지속적인 실측 데이터 축적과 경진대회를 통한 예측모형 등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개방될 경우 농업분야의 스타트업 활성화 등으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농업관측도 보다 고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제6회 농산물우수관리(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10.2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6회 농산물우수관리(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020.10.23.] 2020년 10월 21일 『제6회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3개 부문별 우수사례 12건※을 선정

※ 생산부문 7건, 유통 온라인(on-line)부문 3, 유통 오프라인(off-line)부문 2 선정

- (개최 목적) GAP 인증농가와 유통업체의 우수사례 발굴·홍보로 GAP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를 통한 인증 확산 도모

- (주요 내용) △경진대회 결과··대상은 '농소황토부추작목반(울산광역시 북구)' 이 차지했고, 금상에는 '나눔공동체(경북 안동시)', '롯데마트 과일팀', '마켓컬리 신선팀' 이 차지, △지원내용··GAP인증 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해 GAP 우수사례 기획 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홍보, 온라인 유통업체 입점 지원 등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 내역▐

구분	순위	수상자	시상내역	주요 내용
생산	대상	(울산 북구) 농소황토부추작목반	장관상 (500만 원)	연매출 29억 원의 부추를 생산하는 강소농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조성하여 농업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농업·농촌 실현
	금상	(경북 안동) 나눔공동체	장관상 (300만 원)	GAP인증·친환경·ISO22000등의 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은상	(경북 성주) 월항농협공선출하회	장관상 (200만 원)	정예화 된 GAP공선출하회를 통한 안정적인 물량공급, 유통업체 전속 출하를 통한 GAP 홍보·매출 증대
	은상	(경기 파주) 농업회사법인(주)알가팜텍	장관상 (200만 원)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엽채류 생산을 위해 생산부터 출하까지 단계별 위해요소를 미리 예방하고 관리
	동상	(충북 음성) 농업회사법인(주)진성	농관원장상 (150만 원)	GAP인증, 유기농, 무농약 등 친환경 인증과 글로벌 GAP, USDA 인증을 통한 국제 인증 안전성을 확보한 버섯 생산
	동상	(충남 논산) 논산농협딸기공선출하회	농관원장상 (150만 원)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 지속적인 농업을 실현
	동상	(전남 신안) 신안자은청푸름식품	농관원장상 (150만 원)	지역특산물을 GAP 인증 농산물로 직접 생산하고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으며 매년 판매량 증가
유통 off-line	금상	롯데마트 과일팀	장관상 (300만 원)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맛있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미션 아래 GAP인증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지속 추진
	은상	㈜농협하나로유통 군위농산물유통센터	장관상 (200만 원)	GAP 농산물 전용 판매대 구성 및 홍보 강화로 GAP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
유통 on-line	금상	마켓컬리 신선팀	장관상 (300만 원)	GAP관리시설 및 농가를 보유한 공급사의 상품을 직매입 계약하고 추가 GAP인증 공급사 확대

정책동향

구분	순위	수상자	시상내역	주요 내용
	은상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장관상 (200만 원)	농어촌 생산자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쇼핑몰인 우체국쇼핑사업운영을 통해 다양한 기획전과 프로모션 진행
	동상	㈜위메프	농관원장상 (150만 원)	'농장에서 식탁까지' 기획전 및 GAP인증 농산물의 온라인 판로지원 노력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현황▐

구분	대상품목	인증품목 (개)	인증기관 (개소)	관리시설 (개소)	인증건수 (건)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계획량 (톤)
2020.9	전 품목	279	63	873	9,936	107,980	119,342	2,502,731
2019	전 품목	266	62	817	9,102	99,050	112,106	2,241,973
2018	전 품목	241	55	805	7,782	86,789	101,815	2,117,453
2017	전 품목	223	52	799	6,909	86,091	103,270	2,036,860
2016	전 품목	174	46	802	6,059	74,973	88,859	1,592,052
2015	전 품목	153	44	717	4,019	53,583	65,410	1,068,167
2014	전 품목	136	44	681	2,689	46,323	58,763	795,886
2013	전 품목	129	48	756	2,499	46,000	58,703	749,274
2012	전 품목	110	51	718	1,969	40,215	55,215	691,228
2011	전 품목	89	49	606	1,756	37,146	49,548	642,165
2010	전 품목	86	45	565	1,459	34,421	46,701	509,931
2009	전 품목	59	43	484	1,233	28,562	40,081	434,047
2008	105	59	39	417	1,053	25,158	37,129	419,842
2007	100	50	31	316	364	16,796	24,754	331,421
2006	100	45	21	190	220	3,659	1,373	101,354

※ (2020.9월) GAP 인증 농가 107,980호(농업인 대비 10.7%), 면적 119,342ha(농경지 대비 7.5%)
※ GAP 인증농가: (2016) 75천 호(6.9) → (2017) 86(8.1) → (2018) 87(8.3) → (2019) 99(9.7) → (2020.9) 108(10.7)
※ GAP 재배면적: (2016) 89천 ha(5.3) → (2017) 103(6.3) → (2018) 102(6.3) → (2019) 112(7.0) → (2020.9) 119(7.5)

농식품부, 제20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참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0.10.22.)

○ [농식품부, 제20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참석, 2020.10.22.]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2020년 10월 21일 제20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영상)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식량안보 공동대응**을 위하여 **아세안**과 **한·중·일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

- **(주요 내용)** △코로나19가 역내 식량안보에 미칠 영향과 공동대응 방안 논의,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협력 의지 표명**, △**농업·농촌 정책 수립 지원, 산림협력, 역량강화, 동물질병 방역, 정보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협력** 등 분야별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

◈ 축산 동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요 동향

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2020.10.22.)

○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2020.10.22.] 2020년 10월 15일~21일 동안,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견된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2건이 추가로 발생해 현재까지 총 766건※이 발생

※ 사육돼지 발생현황(14건):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 야생멧돼지 검출현황(766건): (경기) 파주 98건, 연천 287건, 포천 18건 / (강원) 철원 34건, 화천 290건, 춘천 3건, 양구 17건, 인제 15건, 고성 4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건별 세부상황(2020.10.15.~10.21.)▐

구분	신고	확진	시도	시군구	주소	결과
1	2019.10.02.	2019.10.03.	경기	연천	신서면 도밀리 944	양성
⋮						
765	2020.10.13.	2020.10.15.	경기	연천	신서면 대광리 산55	폐사체
766	2020.10.13.	2020.10.16.	강원	양구	남면 적리 산149	폐사체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현황(2020.10.15.~10.21.)▐

검사시료 건수		분석결과				
		합계	폐사체		포획	
			양성	음성	양성	음성
총 155건(폐사체 41, 포획 114)		155	2	39	0	114
발생지역	파주	7	0	0	0	7
	연천	23	1	7	0	15
	포천	23	0	4	0	19
	철원	2	0	0	0	2
	화천	13	0	9	0	4
	춘천	27	0	2	0	25
	양구	18	1	5	0	12
	인제	17	0	5	0	12
	고성	13	0	0	0	13
그 외 지역		12	0	7	0	5

정책동향

◈ 시도별 동향

▌각 시도별 주요 정책 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대구	• 대구시, AI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총력 추진(2020.10.20.) – 대구시는 최근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9월부터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로 도래하는 등 올겨울 AI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AI 방역에 총력 ※ 2020.10월 전 세계 AI 발생은 586건으로 전년(202건) 대비 2.9배 증가,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5건), 대만(84), 러시아(60), 베트남(63), 필리핀(3)에서 지속 발생 중 – 대구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인 9월부터 AI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등 선제적으로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 중
대전	• 대전시, 사람과 동물이 교감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2020.10.16.) – 대전시는 유성구 금고동 582번지 일원 부지 3만 777㎡에 '반려동물공원' 조성 공사를 2020년 10월 16일 착공하여 반려동물공원은 2022년 6월 준공 예정이며, 공원 운영방안 마련 등 준비절차를 거쳐 2022년 하반기에 문을 열 예정 – 반려동물공원 야외에는 동물놀이터, 훈련장, 잔디광장, 산책로 등 조성, 실내에는 각종 교육시설과 콘텐츠 전시실, 셀프펫샤워실, 휴게음식점 등이 들어서며, 특히, 반려동물공원은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을 추진 – 향후 공원에서는 보호자 펫티켓 교육, 반려동물 기본교육 및 문제행동 교정, 어린이 동물매개활동, 반려동물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하절기에는 야외수영장도 운영될 예정,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대전을 위한 동물복지정책 개발에 앞장 설 계획
강원	•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본격 추진(2020.10.21.) – 강원도는 2020년 10월 21일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1~2023)※' 을 심의 · 의결 ※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2019년 12월 27일 제정 · 공포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정책추진과제를 담은 실행계획 – 도내 저발전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KDI 지역낙후도 지수, ▲국토교통부 성장촉진지역 지정 지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지표와 타 광역시도의 균형발전지표를 검토 · 분석하여 강원도에 특화된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발굴하고,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균형발전지수를 담고 있음. – 지원대상지역※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방재정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을 먼저 배려해야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균형발전지수 ▲표준화지수 0 미만, 중위 값(−1.74) ±1값 이내, ▲중위 값(−1.74) −1 미만인 12개 시군을 선정, 이번에 선정된 지원대상지역에는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 정책 목표를 달성 ※ 지역발전도에 따른 대상지역은 ▲균형발전지수 표준화지수 0 이상(춘천 · 원주 · 강릉 · 동해 · 속초 · 홍천 6개 시군), ▲표준화지수 0 미만, 중위 값(−1.74) ±1값 이내(삼척 · 횡성 · 정선 · 양구 4개 시군), ▲중위 값(−1.74) −1 미만(태백 · 영월 · 평창 · 철원 · 화천 · 인제 · 고성 · 양양 8개 시군) 3개 그룹으로 구분
충북	• 충북도, 충북형 농시 조성(2단계) 사업 2021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2020.10.19.) – 충청북도는 농시 조성을 위해 시범적으로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4개 시군에 이어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청주시,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등 4개 시군을 선정※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충북형 농시 조성 사업’ : 농촌인구의 고령화, 인구 유출에 따른 과소화로 소멸 위기에 봉착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시 수준의 생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촌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농촌 인구 유출을 예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식품부) 또는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부)과 같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부족한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충북형 농시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 형식 –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거점지역에 부족한 서비스 분야를 보완해 지역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주변 배후 지역까지 서비스를 제공,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
충남	• 충남도,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유통 활성화 사업’ 지원(2020.10.18.) – 충청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유통 활성화 사업’을 지원, 이번 지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마케팅을 통한 유통 방식이 급속히 확산하는 데 따른 것 – 농식품 온라인 유통시장 확산을 위해 온라인 종합 입점, 유튜브 광고 및 관련 마켓 입점,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2020년 10월 중 유통 품평회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 – 또한, 온라인몰 입점, 유튜브 광고입점, 홍보동영상 제작 등 국내 유명 업체를 선정해 위탁할 예정이며, 해당 경영체는 위탁업체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
전북	• 전북도, 제1회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선정(2020.10.19.) – 삼락농정은 전북도가 지난 6년간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실현을 위해 도정 제1번 과제로 추진한 핵심 농정정책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농어업인 등을 발굴하는 ‘제1회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수상자 3명※을 최종 선정 ※ 보람찾는 농민(최강술), 제값받는 농업(장재순), 사람찾는 농촌(초리넝쿨 마을) 3개 부문 수상자 확정 –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은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농생명산업 선도와 농업·농촌의 가치 제고에 공헌한 이들을 발굴해 농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제도(조례) 제정 등을 통해 추진하는 의미있는 시책
전남	• 전남도, 2021년 귀농귀촌 지원사업 국비 ‘전국 최다’(2020.10.19.) – 전라남도는 농식품부의 ‘2021년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공모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억 5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농촌 이주를 희망한 도시민의 임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 정보제공,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을 지원, 또한, 귀농·귀촌 희망자는 6개월간 농촌에서 거주하며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을 미리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 – 최근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됨에 따라 귀농·귀촌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라남도는 이 사업이 농촌의 고령화 및 공동화 해소, 농업·농촌의 활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와 더불어 도는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사업에 67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규 농업 인력 육성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
경북	• 경북도, 홈플러스와 경북 우수 농특산물 판매 업무협약 체결(2020.10.19.) – 경상북도가 국내 빅3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2020년 10월 19일 경북 농특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경북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민선7기 농업부분 공약인 ‘농업인은 제값 받고 판매 걱정 없는 농업실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모색 –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추세에 맞춰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마련 – (협약 주요 내용) ▲농특산물의 수급안정 및 적정가격 구매 협력, ▲안전한 농특산물의 생산과 공급체계 구축, ▲홈플러스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를 진행할 계획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한편, 경상북도는 2020년 10월 21일~22일 동안 모바일 라이브커머스전문앱 ‘그립(Grip)’에서 경북중소기업상품을 판매하는 경북세일페스타라이브 판매방송을 진행하며 사과쥬스, 밀키트, 즉석식품, 목재 등 경북중소기업 9개 상품을 선보여
경남	• 경남도, 농업으로 심신 달래는 시대, 치유농업교육 호응(2020.10.22.) –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농업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0년 10월 22일과 23일 2일간 ‘치유농업 교육’을 실시, 도내 치유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대와 새로운 농업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마련 ※ 치유농업: 동식물, 농촌환경, 농촌문화 등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된 활동과 산출물을 통하여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신체적·인지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과 활동을 의미 – 이번 교육은 6명의 치유농업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양성평등 의식 교육, 치유농업 현황과 육성방향,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례, 농촌치유 사례적용과 효과검정 교육과 함께 진주시 소재 물사랑 교육농장에서 치유농업 운영 사례 및 실습체험을 통하여 실용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 경남도, 철새 도래 시기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2020.10.21.) – 경상남도는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와 우포늪 등지에서 겨울철새의 도래가 확인됨에 따라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을 강화 – ▲7개 시·군 12개※ 주요 철새도래지 인근도로 59km를 통제구간으로 설정하여 축산차량 출입통제, ▲통제구간 내 낚시금지 조치, ▲철새도래지 및 주변농가에 대하여 지자체 방역차량, 군(軍)제독차량, 광역방제기 및 드론 등을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철새도래지별 소독관리카드와 소독지도를 제작하여 철새도래지 맞춤형 방역관리 실시,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주 1회 야생조류 분변검사와 인근 농가에 대한 정기적인 예찰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 ※ 창원1(주남저수지), 사천2(사천만,광포만), 김해1(화포천), 양산2(양산천, 낙동강), 창녕4(우포·목포늪, 토평천, 봉산저수지, 장척저수지), 고성1(고성천), 하동1(갈사만)
제주	• 제주도, 청정 제주 농산물 해외 수출길 ‘활짝’(2020.10.19.)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2020년 10월 17일 제주시로컬푸드연구회, ㈜박스오블리스 두 기관※과 함께 제주 농가공품 수출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이날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제주 로컬푸드의 상품개발과 해외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자 중심의 지역공동체 회복 등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 (제주시로컬푸드연구회) 22명의 농업인이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은 ‘올바른농부장’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5회(표선 환이정, 한 살림 담을장, 애월 과일하다, 산림조합직거래장터, 사계생활) 주기적으로 장터를 개최해 소비자들과 소통, 최근에는 싱싱오름마트, 마켓프레시, 산림조합, 한살림로컬푸드직매장 등 4개소에 입점 ※ (박스오블리스) 역직구 사이트로 한국제품을 미국 내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총 180여 개의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는 유통 플랫폼을 갖추고 있으며 제주로컬푸드를 이용한 가공품 수출판로 확보에 협력할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시로컬푸드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 유통, 판매, 교육 등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제주시로컬푸드연구회는 제주 농가공품 해외 판매 활성화를, ㈜박스오블리스는 브랜드 상품들의 판로개척을 담당

자료: 각 시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정리·작성

아젠다발굴 세계 도시의 현재와 미래 전망 등

이슈 브리프 세계 도시의 현재와 미래 전망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세계 도시의 현재와 미래 전망 - 세계의 도시, 도시화의 새로운 지평 -" (출처: 2020.7.16일 발간된 'OECD & European Commission, Cities in the World, A New Perspective on Urbanization, OECD Urban Studies. 2020.')(2020.10.19.)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지난 40여 년 동안 세계 인구는 거의 두 배 증가함에 따라, 각국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대도시도 빠르게 성장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Urbanization)가 급속하게 진행되었음.

- 특히, 최근의 기후변화(climate change), 인구 구조적 변화(demographic change), 디지털화(digitalization)와 같은 글로벌 메가트랜드는 도시 거주민의 다양한 삶의 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서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화되고, 일관된 도시정책의 설계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임.

○ 도시는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물리적 공간 개념을 넘어서 최근에는 경제성장, 불평등해소, 디지털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주목※해야 함.

※ 도시 분야 최근 학술 연구 및 정책 트렌드로는 도시의 디지털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Smart City) 분야 연구가 활발함.

〈전 세계 도시화의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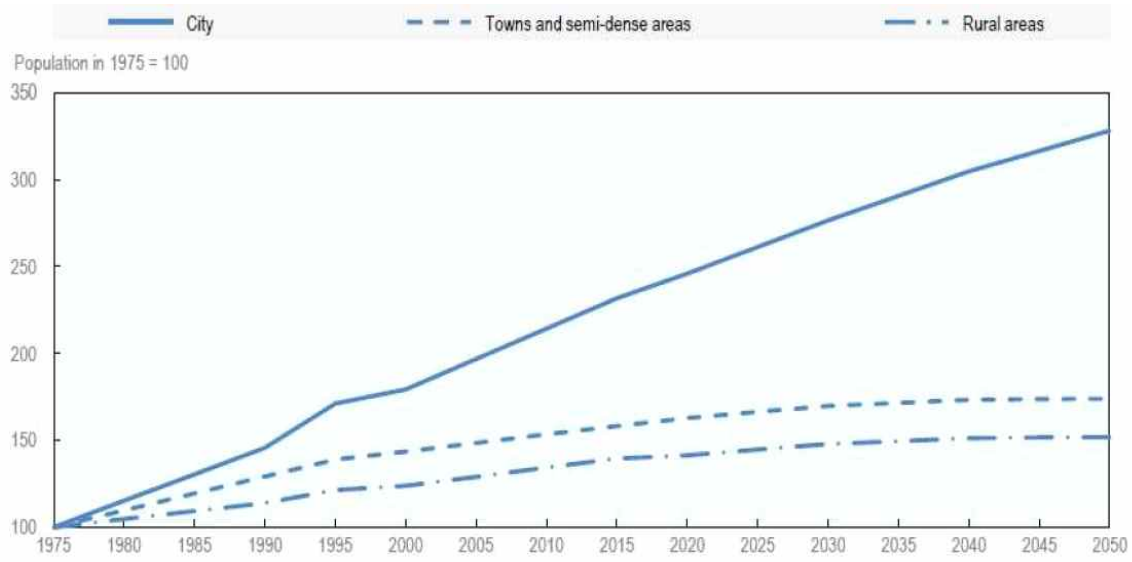
○ 전 세계 지역의 도시화(urbanization)는 지난 40년간 꾸준히 지속되어, 인구 5만 명 이상인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그 이전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도시화가 가속화하는 경향을 보임.

※ 전 세계 도시 거주 인구는 1975년 15억 명에서 2015년 35억 명으로 급증

- 이러한 추세로 도시화가 진행된다면, 2050년에 5만 명 이상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5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아젠다 발굴

▌도시화 정도에 따른 전 세계 인구 변화(1975-2050)▐



자료: OECD, Cities in the World, A New Perspective on Urbanization(2020), P.18

○ 이러한 전 세계적인 도시 인구의 증가 추세는 1) **도시 수**의 **증가**, 2) **기존 도시**의 **확장**, 3) **도시공간**의 **확장**의 **세 가지 방식**으로 **발생**함.

- 1) 증가된 도시 인구의 **1/4**은 **인구 50,000명 이상**인 **도시 수**가 약 5,000개에서 1,000개로 **2배 이상 증가**한 데 기인

- 2) **도시 인구 증가**의 **절반**은 **기존**에 **있던 도시 경계 내**에서 **인구**의 **조밀화** 및 **밀집도 증가**를 통해 **발생**

- 3) **나머지 1/4**은 이전에 비해 면적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기존 도시 공간**의 **확장**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이와 같은 **도시 개발**과 **확장**의 결과로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 인구 수, 도시 수**뿐만 아니라, **도시**의 **전체 인구 밀도**가 **다소 증가**했음.

- 반면, 세계 **지리적**인 **지역적 위치** 및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 간 국가**의 **발전 수준**에 따라 **인구 밀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예를 들어, 저소득(low income) 국가의 경우 도시의 평균 인구 밀도가 고소득(high income) 국가보다 4배 더 높은 상황

○ 지난 40년 동안 세계적으로 전체적인 많은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 중소도시 및 기타 지역 모두 전체 인구 수준**이 **증가**함.

아젠다 발굴

- 전체 인구 중 **도시**의 **인구 점유율**은 37%에서 **48%**로 **증가**한 반면, **중소도시 및 그 밖의 지역**의 인구 점유율이 **감소**

❍ **저소득**(low income) 국가는 **대도시**에서 **인구비율**이 **낮고**, **중소도시 및 기타 지역**에서 **높은** 반면, **고소득**(high income) 국가의 경우 **도시 인구 비율**이 **높고**, **그 이외 지역**의 인구비율이 **낮은 경향**이 뚜렷함.

- 또한, **경제발전**과 **도시**(도시 및 주변 commuting zone)의 **인구 점유율 간 상관관계**는 도시보다 **대도시 지역**에서 **매우 강한 경향**※을 보임.

  ※ 예를 들어, 저소득 국가 인구의 33%만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데 반해, 고소득 국가의 경우 인구의 70%가 대도시에 거주

- 특히, 이러한 경향은 **인구 1백만 명 이상 거주**하는 **대도시**를 **비교**할 때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 간 차이**가 **확연**※함.

  ※ 저소득 국가 인구의 12%만이 인구 1백만 명 이상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반면, 고소득 국가의 경우 인구의 47%가 거주

〈경제발전과 대도시 체계〉

❍ **도시화**(Urbanization)와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은 함께 진행되고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이 **높은 국가**일수록 특히 **도시화**된 **경향**이 있음.

- **100만 이상 대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은 개발도상국 또는 저소득 국가보다 **선진국 또는 고소득 국가**에서 **약 4배 더 높음**.

- 이를 통해, 도시화가 반드시 경제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나, **경제발전**은 **도시화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사실이 확인됨.

❍ **선진국**에서 **도시화**는 역사적으로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이행**하는 **산업 구조적 변화**와 동시에 발생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는 **서비스 부문**으로의 **전환**으로 **심화**되고 있음.

- 국토 공간에 따른 **인구**의 **분산**(the distribution of population) 배치는 한 국가의 **경제구조**(economic structure)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됨.

- 유럽과 OECD 국가의 사례에서 보듯이 **서비스 부문**의 **비율**과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은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

아젠다 발굴

○ 반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도시화**와 **경제 구조적 변화 간**의 **연관성**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음**.

- 대부분 **아시아 국가**는 주로 **산업화 과정**을 통해 **도시화**되었으나, 그 밖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중동**의 **국가들**은 **대규모 천연자원 개발**을 통한 **도시화**가 진행된 사실에 기인함.

○ 한 국가 내에서도 **대도시 지역**의 **인구 분포**의 경우도 **국가 경제발전 차이**에 따라 **대도시 지역**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중위 소득 국가**에서 소수의 큰 대도시 지역이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는바, 이는 **대도시 인구**의 **집중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

- **고소득 국가**에 있어서는 경제적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한 국가 내**의 **많은 대규모 대도시 지역**에 **균형** 있게 **분포**하고 있음.

- **지역 경제 불균형**은 각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다르며, 선·후진국보다 **중간 소득 국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분석

  ※ 중간소득 국가의 경우 타 도시에 비해 큰 대도시 지역의 1인당 GDP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두 배가량으로 나타남.

○ 한 국가 내의 경제적 불균형에 따른 **인구**의 **이주 패턴**과 교육 등을 위한 **인적 자본 이동**이 **공간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 점유율**이 **높은 대도시 지역**은 다른 인구가 적은 대도시 지역에 비해 **인구**의 **순증가**를 **기록**하여 **지속 유입**되는 **경향**이 나타남.

- 한 국가 전체 인구의 학교 교육 연도로 측정되는 **인적 자본 축적도**(Human capital accumulation)는 **대도시 지역**에서 **더 높으며**※, 이는 **유럽**과 **OECD 이외**의 **국가**에서 **더 큰 차이**를 보임.

  ※ 가장 큰 대도시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의 경우 여타 대도시 지역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2.6년 교육 기간이 긴 것으로 관측

〈대도시 지역의 성장〉

○ 세계적으로 **대도시 지역**의 **인구**는 모든 규모의 대도시 지역에서 증가했으나, **가장 큰 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아젠다 발굴

-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작은 다른 대도시 지역보다 매년 0.5%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2000년 이후 4억 명 이상의 인구가 새롭게 이 지역에 거주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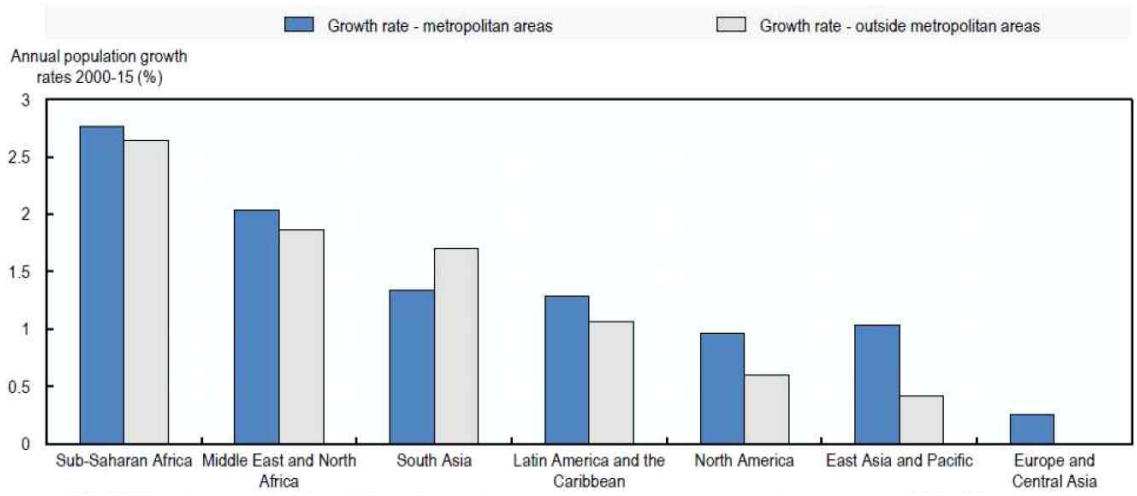
- 반면, 대도시 지역 중 인구가 5백만 이상인 대도시 지역은 수적인 측면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인구 5백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불과 25년 만에 그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대도시의 성장이 두각을 나타냄.

○ 전 세계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국가의 전체 인구 증가는 작은 대도시 지역의 공간적 확산으로 이어짐.

- 그 결과, 이 지역의 많은 작은 마을이 인구 5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로 발전하였고,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인구 1억 명 이상이 1990년 이후 등장한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국가 전체 인구 증가와 대도시 인구 증가 지역별 비율(2000, 2015)▐



- 한편, 이 지역의 대도시 성장은 이러한 세계 지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적정한 인프라 투자 방식, 경제성장의 기회 극대화 및 빈곤 최소화 등 많은 난제를 제시하고 있음.

○ 세계 대도시의 5분의 1은 전 세계적인 대도시의 성장 추세와 인구가 전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아젠다 발굴

- 이들 축소되는 대도시 중 대부분은 **인구 증가**가 **정체**되거나 **국가 인구**가 **사실상 감소**하는 **동아시아**와 **유럽 국가**에 위치함.

- 인구가 **1백만 명 미만**인 **대도시 지역**이 이러한 **인구감소**에 **가장 취약**하며,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전체 대도시 중 1/3 이상**이 2000년과 2015년 사이에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함.

○ 다양한 요인이 **대도시 인구 증가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정치적 중요성, 시장 접근성** 및 **지리적 위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수도**를 **포함**하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 도시 크기를 고려하더라도 평균적으로 **0.8%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시장**에의 **접근성**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도시**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접근성**이 **우수**하고 **물류**가 **발달**된 **해안**과 **강가 도시**의 경우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관측됨.

〈도시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1975년과 201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의 **수**는 **두 배**로 **늘어**나고, **기존 도시**의 **외연적 확장**과 **도시 내**의 **밀집화**를 초래했음.

- 도시는 인구보다 **면적**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대도시, 특히 **1백만 명 이상**의 **대도시 인구 밀도**가 **크게 증가**한 반면, **소도시**(인구 250,000명 이하의 도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인구밀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거의 모든 성장하는 대도시 지역에서 **대도시 주변**의 **통근 지역**(commuting zone)의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함.

- 규모가 쇠퇴하는 **대도시 지역**에서도 **통근 지역**(Commuting Zone)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거나 **느린 속도**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도시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음.

○ **개발도상국** 또는 **저소득 국가**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이에 맞는 **인프라 건설**을 위해 **노력**함.

아젠다 발굴

- 그 결과, **개발도상국가 4개 도시 중 1개**는 **1인당 자본 스톡 수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그러한 도시들이 **더 붐비고**, 인프라 등 **사회기반시설 수준**이 **열악**해짐을 의미함.

- 반면, 다른 극단에서는 **선진국 또는 고소득 국가**의 **5개 도시 중 2개**가 **1인당 인프라 스톡**이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많은 도시**가 **인프라 투자**가 **부족**한 반면, **부유**한 **나라**의 **특정 도시**는 더 분산된 인구 구조를 보상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는 이른바 **인프라**의 **양극화 현상**을 의미함.

❍ 이러한 **대도시**의 **인구 밀집도**의 **차이**로 인해 거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 가능성**이 **도시**마다 **크게 다르게** 나타남.

- 많은 **유럽 도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교통**을 **자주 제공**하고 있으나, 유럽 이외의 도시, 예를 들어 **북미**의 도시의 경우 **대중교통 빈도수**가 유럽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상황**임.

- 일부 아프리카 도시에서 보듯 **대부분 개발도상국 도시**의 경우 **일부**에게만 보다 빈도 **높은 대중교통**의 **접근**을 제공함.

❍ **인구 저밀도 도시**의 경우 거주민에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로 인프라**와 **대중교통**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함.

- 특히, 인구 밀도가 중위 밀도에서 **저밀도**로 **낮아질 경우 인프라 비용**의 **큰 증가**로 이어지는 반면, 인구 밀도가 높은 수준에서 **중간 수준**의 **밀도**로 **감소할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은 **감소**함.

❍ 도시 내에서 **인구 밀도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보다 **대기오염**이 **심각**하며, 특히 **대도시 및 저소득 도시**의 경우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고**, **대기오염 수준**이 **매우 높은 경향**이 있음.

- **대도시 거주민**의 경우 중소도시 및 기타 지역 거주민보다 **대기질**에 **만족도**가 **낮으며**, 이는 대도시 지역 오염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소득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임.

❍ 도시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최근 기후변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많은 도시**가 **홍수, 폭풍 및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됨.

아젠다 발굴

- 도시 거주민 **5명 중 1명**은 **홍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600개 이상**의 **도시**가 **100년 내 홍수**로 **완전히 침수**될 **위험**이 있음.

- **저지대 해안 지역**의 **인구**는 도시 인구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도시 인구의 14%가 **홍수,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함.

〈정책적 시사점〉

○ **인구 증가, 기술 발전, 도시문제**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전 세계 도시의 **인구 집중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저개발 국가**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도시**의 **경제적 효율성**으로 인한 **자연발생적 집중 현상**임.

- 다만, **대도시 위주**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발생, 도시문제 심화 우려가 크므로 **국토균형 발전 정책추진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세계 주요 도시는 **대도시 주변**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도시 거주민 간 불평등 심화, 구도심과 신도심 간 갈등, 디지털 단절, 환경오염 심화, 인프라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였음.

- 도시의 **인구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도시 인구**의 **조밀화, 도심 공간의 부족** 등 도시문제는 **심화**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 이러한 도시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최근 **세계 각국** 및 **주요 도시**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거주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 **스마트시티**※ (Smart City)에 **주목**해야 함.

※ OECD는 '디지털화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서비스와 환경을 조성하는 여러 참여자 간 새로운 협력적 도시개발 접근법'으로 정의

- **스마트시티**는 **ICT 및 빅데이터 기술 발전**에 따라, 당면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가장 **현실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유망 비즈니스 분야**임.

- 그간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적·기술적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여, 스마트시티를 **유망 선도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함.

- 특히,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역량**을 **적극 홍보**하고, **신도시 개발**과 **패키지**로 **수출**하는 방안 등 **사업화**할 필요가 있음.

아젠다 발굴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인식 제고

※ 미국 농무부(USDA)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블로그에 게재된 "Three Key Messages from the First International Day of Awareness of Food Loss and Waste" (2020.9.29.)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인식 제고

○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of the UN)는 2020년 9월 29일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바로 알기"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 행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주요 메시지가 소개되었음.

※ ⅰ) 코로나19는 식량 생산, 소비, 처리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 ⅱ) 음식물 쓰레기 감소는 푸드시스템 개선에 기여, ⅲ) 혁신, 기술, 그리고 인프라의 계발이 푸드 시스템 개선과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함.

○ 첫째, 코로나19는 식량 생산, 소비, 처리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함.

- 코로나19 발생으로 레스토랑, 호텔 등이 영업을 중단하여 해당 식품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50~60%p 감소한 반면, 소비자들의 식품 수요가 식료품점과 식품 배달 업체로 옮겨감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의 식품 원재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함.

- 이와 같은 수요 변화에 식품 공급 사슬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음식물 폐기량이 증가함.

- 코로나19 기간 동안 식품 산업은 ⅰ) 수요 변화(통조림 과일 및 채소에 대한 수요 증가), ⅱ) 공급 변화(수입 식품 물량 감소), ⅲ) 물류 변화(증가한 초과 공급 식품 보관을 위한 냉장 보관 수용량 조절), ⅳ) 상품 용량 조절(레스토랑용 대용량에서 식료품용 소용량으로 전환) 등 네 가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했음.

- 식품 산업은 소비되지 않은 식품을 푸드뱅크와 빈곤계층 구호 활동 단체에 공급※함.

※ Kroger Co.의 경우 우유 재고를 생산자로부터 푸드뱅크로 공급

- 코로나19 기간 동안 미국 농무부(USDA)는 Farmers to Families food box program을 통해 4억 달러에 해당하는 신선식품, 낙농 식품, 육류를 생산자로부터 구입하여 푸드뱅크와 비영리 식품 지원 단체에 공급함.

- 대학생들은 FarmLink 프로젝트를 통해 초과 생산 식품을 생산자로부터 푸드뱅크로 배달하였음.

아젠다 발굴

- 이와 같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활동은 i) 미국의 식품 공급 시스템을 개선, ii) 식품 기부 증가로 빈곤 계층에 대한 식품 공급 상황 개선, iii) 음식 쓰레기 감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둠.

-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연간 평균 1천 5백 달러에 해당하는 음식쓰레기가 배출됨.

- 소비자들은 설문조사에서, 코로나 19 기간 증가한 가정 내 요리 활동을 통해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 쓰레기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응답함.

- 코로나19 기간 동안 높아진 음식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향후 음식 쓰레기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음식물 쓰레기 감소는 푸드시스템 개선에 기여함.

- 미국에서는 한 해 생산된 식품의 1/3 이상이 소비되지 않고 음식쓰레기로 낭비됨.

- 식품이 낭비되면 식품 공급 활동※에 연관된 토지, 물, 노동, 에너지와 같은 투입요소 역시 낭비된다고 볼 수 있음.
  ※ 생산, 가공, 운송, 저장, 음식 쓰레기 처리 등

- 음식쓰레기와 관련하여 낭비되는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푸드시스템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음.

- 코로나19 기간 동안 증가한 온라인 주문, 배달 및 포장 주문을 통해 생산, 주문, 재고 관리의 효율성 개선이 이루어진 결과 음식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음.

- 잔여 음식물의 경우 동물 사료 혹은 퇴비로 사용하는 등 새로운 생산활동에 활용될 수 있음.

- 코로나19 기간 동안 연방 및 각 주 정부는 식품 생산자, 가공업체, 식료품점과 연계하여 식품 공급 사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함으로써 식품의 공급 및 운송을 조절하였으며, 이를 통해 음식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음.

○ 셋째, 혁신, 기술, 그리고 인프라의 계발이 푸드시스템 개선과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함.

- 기술과 인프라를 통해 식품 공급의 효율이 향상될 수 있음.

아젠다 발굴

- 냉장 보관과 같은 온도 유지 운송 기술과 친환경 플라스틱 포장재는 기술개발에 해당하며, 식품 운송 네트워크의 효율화는 인프라에 해당함.

- 미국 농무부는 가공시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주고 버려지는 잔여물들로 새로운 물질※을 생산하는 혁신기술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AIA(Agricultural Innovation Agenda)에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50%p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크린랩, 말린 과일 스낵 등

■ 자료 출처:
https://www.usda.gov/media/blog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식품영양라벨링 정책

※ 유럽의회조사처 "Nutrition labelling schemes used in Member States" (2020.7.27.)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식품영양라벨링 정책

○ 유럽의회조사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Front-of-pack nutrition labelling을 통한 식생활 개선 및 소비자 선택 편의 증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유럽연합 성인의 절반이 과체중 상태이며,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 건강한 식습관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로 부상함.

- FOP(Front of pack) 라벨링은 단순화된 식품영양표시를 제품의 후면이 아닌 전면에 표시하여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을 돕기 위한 정책임.

○ 현재 FOP 라벨링을 부착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며, FIC(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regulation이 유럽연합 내 주된 식품 라벨링 정책임.

- FIC 규정은 지정된 영양 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요소(콩, 견과류, 글루텐, 유당)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이러한 성분들은 가시성을 위해 글씨체, 색깔을 다르게 하여 강조해야 함.

- 의무표시요소 이외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바탕으로 개발되고, △과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라벨을 추가로 부착할 수 있음.

아젠다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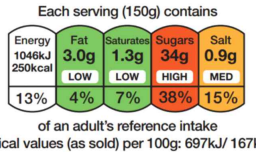
○ 현재 FOP 라벨링은 스웨덴, 핀란드, 슬로베니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국가 기관이나 학술 단체의 관리를 받으며 운영됨.

- (스웨덴) Keyhole logo는 적거나 더 건강한 지방, 적은 설탕, 소금을 포함하거나, 더 많은 식이섬유와 통곡물로 이루어진 제품에 대하여 Nordic Nutrition Recommendations(NNR)에 따라 무료로 부착되며, 1989년에 Swedish National Food Agency가 개발·보급하였음.

- (핀란드) Heart symbol은 핀란드 심장 및 비만 학회의 개발과 검증을 바탕으로 사용되며 사용 시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함.

- (영국) Traffic Light Label은 기존의 영양성분의무표시제에 1일 섭취량 기준을 반영하여, 초록(낮음), 주황(중간), 빨강(높음)의 색깔을 추가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도움.

▌유럽연합 회원국 및 영국의 FOP 사례▐

구분	스웨덴: Keyhole Logo	핀란드: Heart Symbol	영국: affic Light Label
로고			
개발주체	Swedish National Food Agency	핀란드 심장 및 비만 학회	여러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부착 비용	비용 무(無)	한 품목당 연간 500유로 소규모 업체는 60% 감면	비용 무(無) (의무표시제에 색깔 추가)

○ 유럽연합의 식품라벨링 정책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정책을 반영하여 소비자들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선택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목표로 변화할 예정임.

- EU 집행위원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FOP 라벨링 정책이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FOP 라벨링 정책을 의무화하기로 함.

-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2020년 5월에 발표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정책과 EU Green Deal의 기조에 맞춘 것임.

- 또한, 이러한 정책은 식품 생산자들이 FOP 라벨 기준에 맞는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자료 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html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일본 농촌 현황(인구감소, 귀농귀촌, 코로나19 영향)

※ 일본 농림수산성 "農村における所得と雇用機会の確保に向けて(農村をめぐる事情と検討課題)" (2020.10.13.)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일본 농촌 현황(인구감소, 귀농귀촌, 코로나19 영향)

〈개요〉

○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2020.3.31. 발표)의 농촌정책·토지 이용 방법 프로젝트 추진 검토를 위해 새로운 농촌정책 검토회(이하 검토회)를 신설하였으며, 2020년 10월 13일 5차 검토회에서는 일본 농촌 현황(인구감소, 귀농·귀촌, 코로나19 영향)과 농촌 소득과 고용기회에 대해 논의하였음.

〈인구감소 사회〉

○ [일본 인구] 일본 총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쿄권에 쏠려 있음. 2050년에는 약 절반의 지역에서 인구가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인구감소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 (고령화·인구감소) 농산어촌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는 도시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산간지역일수록 인구감소가 크게 나타남. 이로 인해 가구 수가 9가구 이하인 마을의 비율이 증가하고, 농촌 마을에 농가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 (인구감소 영향) 인구감소로 인해 과소지역에서는 빈집증가, 경작 포기지 증가,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귀농·귀촌 증가〉

○ [귀농·귀촌 증가] 최근 3대 도시권(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서 전입하는 인구가 전출 인구를 상회하는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며, 귀농·귀촌 동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최근 지방 이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40대의 젊은 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도시 거주민의 약 40%가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함.

아젠다 발굴

○ [농촌 생활] 지방 이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 중 농촌에 살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농림어업(취미)이 34.8%, 농림어업(주요 수입)이 29.8%로 농업과 연관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수임. 연령별로 보면 20~29세의 젊은 층에서 농업 연계되는 것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임.

○ [두 지역 거주(듀얼라이프)] 농촌 이주에 관한 관심뿐만이 아닌, 도시와 지방 두 지역에 거주하는 듀얼라이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이는 도시에서는 불가능한 나 자신을 위한 삶,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 것에서 기인함.

○ [관계인구] 정주 인구 및 교류인구가 아닌 지역과 다양한 관련성을 맺는 인구로 3대 도시권의 18세 이상 거주자(약 4,678만 명) 중, 약 20%(약 1,080만 명)가 일상생활권, 통근 등에 의한 관계인구로 집계됨.

○ [농촌 이주조건] 농촌 이주 중점 요건으로는 '생활이 유지 가능한 수입'으로 응답한 비율이 약 28.8%로 가장 높게 조사됨.

- (소비·지출 비교) 도시와 소도시(인구 5만 명 미만)·농촌의 1세대당 월간 평균 소비·지출을 비교하면 소도시·농촌은 대도시의 90% 수준임. 품목별로 보면 소도시·농촌은 광열·수도, 교통·통신비는 대도시를 상회하였으며, 그 외에는 대도시를 하회하였음.

〈코로나19 영향〉

○ [업종·고용형태·지역별]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시행률은 업종, 고용형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임.

- 전체 업종 중 30%가 재택근무를 경험하였고, 재택근무 경험 비율은 교육·학습지원 50.7%, 금융·보험·부동산 47.5%, 도매업 45.5% 순으로 높았으며, 농림어업은 17.7% 수준에 머물렀음.

○ [재택근무 지속 의향]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재택근무를 희망하는지 조사한 결과, 2020년 5월 조사에서는 62.7%, 7월 조사에서는 75.6%가 희망한다고 응답하여,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아젠다 발굴

○ [재택근무 관련 의식변화] 재택근무경험자는 미경험자 대비 삶과 업무의 균형 중에서 삶의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 직업선택·부업 등에 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남.

○ [지방 이전 관심 증가] 20대를 대상으로 U·I턴 이주 및 지방 전근을 희망하는지 조사한 결과, 2020년 2월에는 21.8%가, 4~5월은 36.1%로 희망한다고 응답하여 14.3%p 증가하였음. 그 이유로는 '도시에서 일하는 것에 리스크를 느낌', '재택근무로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 가능' 등이 있었음.

○ [도시권 사무실 수요 변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됨에 따라 도쿄 중심지역의 사무실 공실률이 증가함. 또한, 사무실 크기를 축소해 가는 경향을 보임.

○ [워케이션(Worcation)]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이며, 휴가지에서의 업무를 인정하는 근무 형태로 일본에서 점차 도입되고 있음.

- 워커이션 도입에 관심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경영자의 과반수가 도입에 대해 긍정적이며, 재택근무를 이용 중인 회사원의 60% 이상이 긍정적인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워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숙박형 농촌관광(농림수산성), 산림 서비스(산림청), 국립공원(환경성) 등을 활용한 정부 부처의 정책 추진이 필요함.

○ [농업을 활용한 다양한 근무방식] JA(일본농협)의 연계를 통해 민간기업이 JA조합원에게 농작업을 위탁하는 노동력 지원체계 활성화를 추진함.

- 기업은 농업에 관심이 있는 자, 사회적약자 등을 고용하여 농작업 팀을 꾸려 JA를 통해 노동력이 필요한 농가에게 위탁받은 농작업을 진행하는 구조임.

- 코로나19로 인해 농업현장은 노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임.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 등과 연계하여 타 업종의 노동력을 농업계로 유입하여, 농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취약계층 지원 및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야의 노동력 흡수를 통해 농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아젠다 발굴

〈농업과 다양한 일을 함께하는 삶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2020년 7월 29~8월 24일, 농업을 포함한 타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설문조사 시행(응답 145건)

① 농업을 하면서 타 업종을 함께 종사하는 것의 장·단점

- (장점) 수입확보·안정화, 타 분야 정보확보, 네트워크 구축
- (단점) 농작업과 일정 조정

② 타 업종과 농업을 함께 종사함에 있어 농업의 매력

- 생활 충실, 자급, 지역 및 사람과 교류

③ 농업을 포함한 멀티워크※에 관련하여 개선 및 도전하고자 하는 것

※ 한 가지 일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닌 동시에 복수의 일을 종사하는 근로방식

- 효율화, 사업확대, 6차 산업화

④ 농업을 포함한 멀티워크를 함에 있어 새로운 개선 및 도전 시 장애 요소와 원하는 환경

- (장애 요소) 인정농업인이 아니면 강습 수강 불가, 농지 확보
- (희망 사항) 멀티워크에서 본격적인 농업으로 전환 모델, 농지 임차·매매 원활화

⑤ 농업을 포함한 멀티워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의 저변확대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 농업 진입장벽 낮추기, 신규 농업인 기술지도, 신규 농업인 지도처 지원 등

⑥ 농업을 포함한 멀티워크 애칭

- 프리스타일애그리, 플러스원농업, 농마루워크, 농 and fan, 멀티농민, 멀티애그리, 멀티파머, 반농반× 등

⑦ 기타 의견

- 멀티워크를 하는 이유는 농업으로 인한 수익이 없으며, 적자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함.
- 농업에 집중하고 싶지만, 시간과 수익, 위험의 균형이 맞지 않음.
- 새롭게 농업에 도전 시 실패 위험을 줄이는 제도가 필요함.
- 개인 생산자는 농산물 판매가 힘듦. 쉽게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환경정비가 필요함.

〈자영 농업인 수익〉

- 자영 농업인의 약 90%가 연간 수익이 400만 엔을 밑돌며, 수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30%를 차지함.

〈농업 외〉

- 농업 외에 1가지 일을 겸하는 비율은 약 70%이며, 2가지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30%
- 자영 농업 이외의 일 중 가장 소득이 높은 일의 연간 소득은 약 60%가 400만 엔 미만이라고 응답

■ 자료 출처:
https://www.maff.go.jp/j/study/nouson_kentokai/farm-village_meetting.html

아젠다 발굴

언론 동향 농산촌 태양광시설 주요 동향

※ 아젠다 발굴을 위해 주요 일간지와 농업전문지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농산촌 태양광시설 주요 동향

○ 농산촌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이는 무분별하게 들어선 태양광발전시설이 난개발과 재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데 따른 조치

〈법원·정부, 농산촌 태양광시설 난립 제동〉

○ 충북 청주지법 행정1부는 태양광발전사업체 36곳이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3건의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혀

○ [충주시, 업체 개발신청 불허] 충주시는 2019년 11월 말부터 2020년 1월 사이 이들 업체가 엄정면·앙성면 내 산으로 둘러싸인 논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것에 대해 모두 불허처분

- 이는 집중호우 때 토사 유출로 인한 하류의 재해 위험이 높고, 인근 지역에 이미 같은 시설이 다수 설치돼 있어 농촌 환경 훼손을 심화시킬 것이란 사유도 고려

○ [업체 입장] 이에 업체들은 "충주시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했고, 이미 허가받아 시설을 설치한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 [청주지법 "주민들 생명 문제 시 재량권 인정해줘야" 판결] 법원 재판부는 "기존 다른 업체에 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나중에 한 신청도 형평상 허가를 내줘야 한다면 난개발을 부추기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결론내려

- 그러면서 "근래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해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처분 사유가 분명한 충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부연 설명

〈국정감사, 산지태양광 산사태 발생 위험 지적〉

○ 산사태 위험지역에 산지태양광 시설이 설치되고 있고, 산지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도 소홀히 시행돼 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

아젠다 발굴

○ 2020년 10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실시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산지 태양광 발전 설치 문제가 가장 큰 이슈, 올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문제가 집중 거론

- 올해 여름 발생한 산사태 피해와 산지 태양광 설치의 연관성이 크고, 산림청이 정권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산지 태양광 설치를 무분별하게 허가해 산림 훼손을 방치했다는 것

- 산사태와 관련, 야당 의원들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의 안전성문제를 제기, 올여름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1만 2,923개소 가운데 27개소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만큼 태양광발전시설을 산사태를 유발한 한 요인으로 지목

○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올해 발생한 산사태의 92%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었다" 면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고 강조

○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전문가에 따르면 국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토지 성질, 자연재해와 시설 구조물간의 역학관계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사면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며 "사면안전성 검토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필수 조건으로 정하고 옹벽 설치 등을 강화해야 한다" 고 언급

-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2020년 6월 기준 전국에 설치가 완료됐거나 설치 중인 산지 태양광 시설은 1만 2,923개소, 6,530ha 면적으로 여의도의 23배에 달한다" 며 산사태 등 안전 문제와 산림 보존 등의 범위에서 산지태양광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

-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영재 경북대 교수(토목공학과)는 "지금 설치된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은 설치 과정에서 사면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옹벽 시설과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올 여름 5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와 같이 기후변화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산지 태양광 시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며 "사면안전성 검토와 모듈(패널) 자체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법적으로 강제화해야 한다" 고 언급

- 이에 대해 박종호 산림청장은 "사면안전성 검토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하는 것이고 산지관리법에는 규정이 없다" 며 "사면안전성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고 답변

아젠다 발굴

- 또한,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이 지난 2018년 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평균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로 **낮춰 허가기준**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15도에서 **10도**로 **더 낮춰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도 지적

- 이에 박종호 청장은 "15도에서 10도로 낮추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고 답변

○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산림청이 **산지태양광 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해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

- "현행법상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거의 하지 않는다" 며 "올 상반기에 한 번 한 **전수점검**은 **지방자치단체**의 **결과 보고만 받는 식**이었고, 지자체는 시설을 **육안**으로 **살펴보고** 전년 조사 결과를 그대로 갖다 붙이는 등 결과 보고서를 대충 작성했다" 고 언급

○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산림청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 과정에서 산사태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았다. 산림청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것은 **총 1만 2,526건**으로, **1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에 **284개**, **2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에 642개**가 **설치**됐다" 며 "특히 1등급 위험지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여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 강조

○ 한편,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2020년 10월 12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저수지 태양광 사업**이 지역민과의 협의를 원활하게 이끌어내지 못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하면서 **주민 참여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

- 한국농어촌공사는 2012년 처음 **저수지**에 **태양광**을 설치한 이후 올해까지 **20지구**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219년에는 2022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에 **4,280MW**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지금은 목표가 10분의 1인 **300MW**로 **감소**한 상황

- 이 배경에는 '저수지에 태양광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원칙 때문인데, **지역주민들**은 **환경**과 **경관**을 **이유**로 **저수지**에 **태양광 장비**를 **설치**를 **꺼려**

아젠다 발굴

- 이에 맹성규 의원은 "농업인의 의사를 수렴하면서도 태양광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태양광이 설치된 저수지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전기세를 감면하는 등 주민들도 한국농어촌공사의 태양광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

〈정부, 산지태양광 설치기준 강화〉

❍ [산지태양광 설치기준 강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2020년 10월 21일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 올여름 집중호우로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 유출 피해가 27건 발생하는 등 안전성문제가 제기되면서 마련

- 이에 따라 2021년 상반기부터는 500kW 이상의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하려면 전기안전공사의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며, 규모에 관계 없이※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때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 현재는 2만㎡(6,050평) 미만 규모만 제출

- 이미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하여 산림청은 2020년 5~8월 실시한 산지태양광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00곳의 '재해 우려 설비'를 선정해 3년간 정밀 점검하기로

자료: "[2020 국정감사 | 산림청] "산지 태양광 무분별 허가로 산림 훼손…부실 점검이 산사태 키워"" (한국농어민신문, 2020.10.16.), "[2020 국정감사] "산사태 피해면적 계속 증가…줄어든 사방사업 예산 확대를"" (농민신문, 2020.10.19.), "짝초 위기 저수지 태양광, 주민참여방안 강구해야" (농수축산신문, 2020.10.19.), "[2020 국정감사] 산림청 · 산림조합중앙회 · 한국임업진흥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수축산신문, 2020.10.20.),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농수축산신문, 2020.10.21.), "법원 · 정부, 농산촌 태양광시설 난립 잇따라 제동" (농민신문, 2020.10.23.)

통계·조사 한우농가 영농 승계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자료 : 농촌진흥청(2020.10.20.)

❑ 개요

○ [농촌진흥청, 전국 한우농가 영농 승계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발표, 2020.10.20.] 한우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세대교체를 위해 실시한 영농 승계 실태와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

※ (조사 대상) 2020년 4~6월에 전국의 한우농장 경영주와 승계자 총 361명을 대상으로 실시

▌연령대별 조사 대상자 분포(단위: 명, %)▐

구분	경영주		영농승계자		전체	
	명	%	명	%	명	%
20대	0	0.0%	88	30.7%	88	24.4%
30대	1	1.4%	151	52.6%	152	42.1%
40대	16	21.6%	48	16.7%	64	17.7%
50대	36	48.6%	0	0.0%	36	10.0%
60대	21	28.4%	0	0.0%	21	5.8%
합계	74	100%	287	100%	361	100%

❑ 조사 결과

○ [영농 승계자 농장 경영 참여 형태] 영농 승계자가 농장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는 독립경영 29.6%, 공동경영 28.8%, 협업경영 25.4%, 경영준비 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승계자의 58.4%가 한우, 축사 등 자신의 자산을 갖고 경영에 참여

▌영농 승계자 농장 경영 참여 형태(단위: 명, %)▐

구분	경영주		영농승계자		전체	
	명	%	명	%	명	%
경영준비	13	18.3%	16	5.6%	29	8.1%
협업경영	8	11.3%	83	28.9%	91	25.4%
공동경영	6	8.5%	97	33.8%	103	28.8%
독립경영	19	26.8%	87	30.3%	106	29.6%
타인승계	6	8.5%	0	0.0%	6	1.7%
기타	19	26.8%	4	1.4%	23	6.4%
합계	71	100%	287	100%	358	100%

※ 미응답자 3명 제외

○ [승계 절차] 경영주가 살아있을 때 단계적으로 경영권과 소유권을 옮기겠다는 응답이 5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승계 계획을 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1.7%

▌승계 절차(단위: 명, %)▐

구분	경영주		영농승계자		전체	
	명	%	명	%	명	%
생존시 단계적 경영권 이양, 사망 후 소유권 이양	8	11.3	37	12.9	45	12.6
생존시 일시에 경영권 이양, 사망 후 소유권 이양	5	7.0	7	2.4	12	3.4
생존시 단계적 경영권과 소유권 이양	34	47.9	172	59.9	206	57.5
생존시 일시에 경영권과 소유권 이양	10	14.1	24	8.4	34	9.5
사망 후 경영권과 소유권 이양	2	2.8	17	5.9	19	5.3
결정된 바 없음	12	16.9	30	10.5	42	11.7
합계	**71**	**100**	**287**	**100**	**358**	**100**

※ 미응답자 3명 제외

❍ [경영주와 승계자 간 갈등] 경영주와 승계자 사이 갈등에 대해서는 경영주 9.4%, 승계자 25.5%가 갈등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갈등 원인으로는 '의사결정 참여'(58.7%), '노동 및 근로형태'(36%), '경영 역할 분담'(35.2%) 순

▌경영주와 승계자 간 갈등(단위: 명, %)▐

구분	경영주		영농승계자		전체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31	48.4%	56	19.6%	87	24.9%
아니다	14	21.9%	60	21.0%	74	21.1%
보통	13	20.3%	97	33.9%	110	31.4%
그렇다	6	9.4%	42	14.7%	48	13.7%
매우 그렇다	0	0.0%	31	10.8%	31	8.9%
합계	**64**	**100%**	**286**	**100%**	**350**	**100%**

※ 미응답자 11명 제외

▌경영주와 승계자 간 갈등 원인(단위: 명, %)▐

1+2순위	경영주		영농승계자		전체	
	명	%	명	%	명	%
의사결정 참여	30	40.5%	182	63.4%	212	58.7%
경영 역할 분담	26	35.1%	101	35.2%	127	35.2%
수익 및 비용 배분	11	14.9%	52	18.1%	63	17.5%
노동 및 근로형태	18	24.3%	112	39.0%	130	36.0%
미래경영 이양	12	16.2%	55	19.2%	67	18.6%
기타	12	16.2%	41	14.3%	53	14.7%
없음	6	8.1%	20	7.0%	26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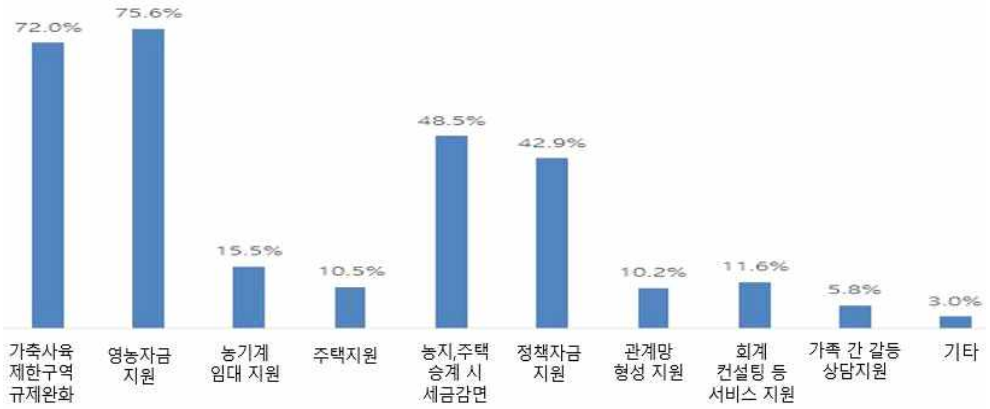
※ 복수 응답

- 원활한 승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응답자의 75.6%가 '영농자금 지원'을 꼽았고, 그 뒤를 이어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제완화(72.0%)', '농지, 주택 등 승계 시 세금 감면(48.5%)' 순

▌영농 승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단위: 명, %)▐

1+2+3순위	경영주		영농승계자		전체	
	명	%	명	%	명	%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제완화	51	68.9%	209	72.8%	260	72.0%
영농자금 지원	43	58.1%	230	80.1%	273	75.6%
농기계 임대 지원	17	23.0%	39	13.6%	56	15.5%
주택지원	7	9.5%	31	10.8%	38	10.5%
농지, 주택 등 승계 시 세금감면	30	40.5%	145	50.5%	175	48.5%
정착자금(생활비 등) 지원	32	43.2%	123	42.9%	155	42.9%
지역 네트워크(관계망) 형성 지원	9	12.2%	28	9.8%	37	10.2%
회계, 컨설팅 등 서비스 지원	12	16.2%	30	10.5%	42	11.6%
가족 간 갈등 상담지원	5	6.8%	16	5.6%	21	5.8%
기타	1	1.4%	10	3.5%	11	3.0%

※ 복수 응답



- 가장 필요한 상담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응답자의 87.3%가 '축산기술 상담'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증여 및 상속 상담'은 승계자(69.7%)가 경영주(36.5%)보다 관심이 더 많아

▌가장 필요한 상담지원 프로그램(단위: 명, %)▐

1+2+3순위	경영주		영농승계자		전체	
	명	%	명	%	명	%
축산기술 상담 프로그램	66	89.2%	249	86.8%	315	87.3%
축산경영 상담 프로그램	62	83.8%	252	87.8%	314	87.0%
가족 및 배우자 간의 갈등관리 상담 프로그램	17	23.0%	50	17.4%	67	18.6%
경영주와 승계자 간의 갈등관리 상담 프로그램	16	21.6%	83	28.9%	99	27.4%
증여 및 상속 상담 프로그램	27	36.5%	200	69.7%	227	62.9%
기타	10	13.5%	24	8.4%	34	9.4%
없음	0	0.0%	2	0.7%	2	0.6%

※ 복수 응답

❍ [증여세 감면 규정 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의해 축사용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84.0%가 몰랐다고 하였고, 응답자의 81%가 2020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 규정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응답

※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증여세 감면 규정 인지 여부(단위: 명, %)▐

구분	경영주		영농승계자		전체	
	명	%	명	%	명	%
알고 있음	8	11.4%	49	17.1%	57	16.0%
몰랐음	62	88.6%	238	82.9%	300	84.0%
합계	70	100%	287	100%	357	100%

※ 미응답자 4명 제외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 규정 지속에 대한 의견(단위: 명, %)▐

구분	경영주		영농승계자		전체	
	명	%	명	%	명	%
매우 반대	1	1.5%	6	2.1%	7	2.0%
반대	2	3.1%	2	0.7%	4	1.1%
보통	9	13.8%	47	16.4%	56	15.9%
찬성	16	24.6%	59	20.6%	75	21.3%
매우 찬성	37	56.9%	173	60.3%	210	59.7%
합계	65	100%	287	100%	352	100%

※ 미응답자 9명 제외

◈ (독립경영) 승계자가 별도의 축사를 독립적으로 소유 · 운영하다가 향후 인수합병
◈ (공동경영) 승계자가 농장을 함께 운영하고 수익금을 나누는 경우(소유권 有)
◈ (협업경영) 승계자가 노동에 따른 월급 또는 연봉 등을 받는 경우
◈ (경영준비) 승계자가 다른 일을 하면서 농장 승계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 (타인승계) 영농승계자가 부재하여 제3자에게 승계, 매각하는 등 타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